목포대·순천대 '대승적 통합 합의' 환영 목소리 봇물

김영록 지사 "도민과 함께 의대 설립 염원 반드시 이룰 것"
박지원 "도민·金지사의 승리"…김문수 "목표 완성 최선"
시장·군수協 "의과대학 설립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통합의대 추진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인 통합의대를 신속하게 정부에 추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통합의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지사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위한 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재정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지사는 "양 대학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를 응원하고 함께 성원해야 할 것"이라며 "온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선언, 통합대 명의로 전남도민의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하게 된다 한다"며 "전남도민과 김영록 지사의 승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교수, 학생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목포 김원이·순천 김문수 의원과 전남도의회의 협력도 컸다고 평가한다"며 "전남에 의대가 설립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승적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합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순천대 의대 유치 확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서도 전남 동서부간 갈등보다는 상생해야 하며 정부, 전남도, 양 대학, 양 지역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최종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환영 성명을 통해 "전남 22개 시·군은 두 대학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대 유치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180만 전남도민의 생명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큰 숙제였다"며 "지역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양 대학교의 책임있는 결정은 이 같은 도민의 오랜 염원을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국립의대 유치를 통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에서도 차별없는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결단을 해준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에게 감사드리며 두 대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G-패스' 카드디자인 골라주세요"

시민 참여로 결정…광주온 설문조사·오프라인 투표

광주시는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온(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를 함께 실시한다.

'광주G-패스'는 2025년 1월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은 K-패스와 연계해 20-64%를 환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광주온에서 시민 정책참여단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성인용 교통카드 디자인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상무역·광주송정역·금남로4가역·동명중학교·시청 등 5개소에서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온(ON) 누리집(http://gwangjuon.gwangju.go.kr)에서 '시민정책참여단'에 가입한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도안 순으로 1-3위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카드 디자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G-패스 카드는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편의점 등 한페이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박선강 기자

예산안 시정연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독립유공자 年100만원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3곳·약국 3곳과 업무협약…의료 혜택 강화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씨엠맘 삼성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광주전남지회, 광주센트럴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3곳, 약국 3곳과 '광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편의 제공과 의료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씨엠맘 삼성병원장, 송경섭 가족보건의원 지부장, 박인식 광주센트럴병원 총무부장, 고욱 광복회 광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병원 인근 약국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참한다.

씨엠맘 삼성병원 인근의 노벨약국, 가족보건의원 인근의 참우리약국, 광주센트럴병원 인근의 수완아이러브약국이 사업 참여 의지를 밝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협력,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홍보 활동 등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은 내년 1월부터 독립유공자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유족의 배우자(건강보험가입자) 등에게 의료 지원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앞서 서구 상무병원·상무그린약국, 북구 일곡병원·일곡우리약국·일곡행복약국을 지원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은 보훈병원 외 자치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희망자는 광주시에서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을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증을 제시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는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급여 본인부담금만을 지원하며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는다. /박선강 기자

道, 저출생 극복·보육 공공성 강화

전남도는 최근 도의회 초의실에서 어린이집 폐원 대응 간담회를 열어 영유아 보육·교육 전문가와 저출생 극복과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김미경·박경미 전남도의원, 박상선 전남도어린이집연합회장, 윤영애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지혜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남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어린이집 폐원 특성', 김현민 연구위원의 '어린이집 폐원 유형별 대응 방향'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현민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금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 전남도 관계자는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린이집 폐원 대응책 등에 머리를 맞댔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